



기획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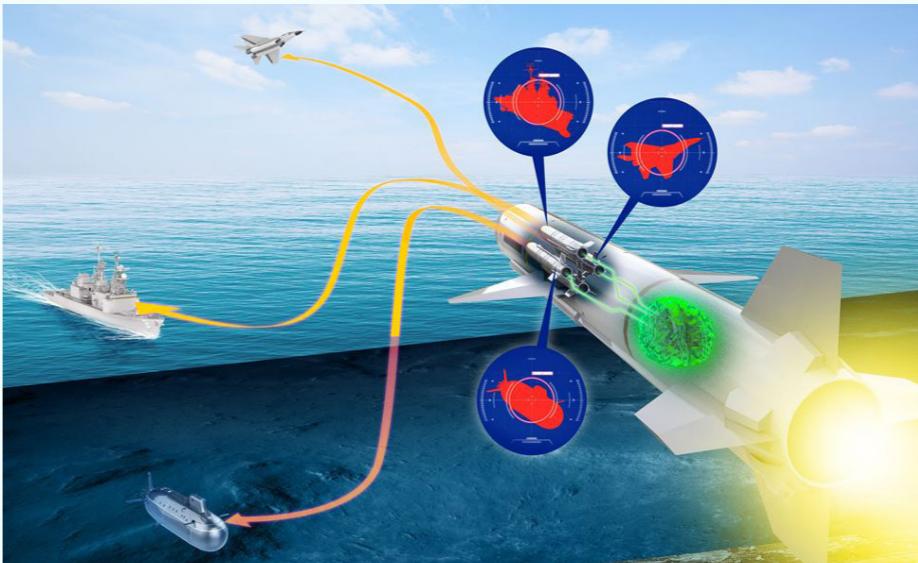
2020년 대한민국 국군 첨단으로 갈아입니다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다. 2020년도 국방예산이 12월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7.4% 증가한 50조1527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건국 이래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가 개막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첨단화 및 정예화, 장병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20년 국방예산을 자세히 소개한다.

전년 대비 7.4% 증가한
50조1527억 확정

국방예산 사상 첫 50조 시대 개막

군 첨단화·정예화, 장병복지 향상에 집중 투자



2020 국방예산은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사진은 초고속·초위력 정밀타격 소개 그림이다.
국방개혁실 제공

우리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조를 넘어섰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40조3347억 원이던 국방예산은 연평균 7.5%의 증가세를 보이며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이 늘어나 50조를 돌파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도 국방예산 가운데 첨단 무기 연구·개발·도입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019년 대비 8.5% 대폭 증가한 16조680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가 빠짐없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정부 9년간 평균증가율 5.3%의 약 2배다. 특히 2020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3.3%로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25.8%로 출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병력운영비·전력유지비를 합친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6.9% 증가한 33조4723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0년도 국방예산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2056억 원의 예산이 감액됐으나,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 확보 및 장병 복지 예산이 반영돼 정부안과 동일하게 조정됐다. 심사과정에서 방위력개선비는 1671억 원 감액됐고, 1560억 원 증액돼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 원 감액 조정됐다.

국방부는 “2020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상윤 기자



장병들이 병영문화센터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다. 조용학 기자

방위력개선비, 전년 대비 8.5% 대폭 증가해

방위력개선비 주요 내용



군사력 강화를 위한 방위력개선비가 대폭 증가했다. 사진은 육군의 최신예 전차가 기동하는 장면이다. 육군 제공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국방예산

안에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가 빠짐없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라는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9년보다 8.5% 증가한 방위력개선비 부분이다. 방위력개선비는 1671억 원 감액과 1560억 원 증액으로 최종적으로는 정부안보다 111억 원 감액 조정됐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 기초비행훈련용헬기(364억 원), 공중전투기동 훈련체계(174억 원), 방독면-II(200억 원), 자항기뢰(50

억 원) 등이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30mm 차륜형대공포(275억 원),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271억 원), 81mm 박격포-II(111억 원), 전구합동화력 운용체계 성능개량(101억 원) 등 전력화가 시급한 신규무기체계와 부품국산화 관련 사업 115억 원, 배상금 현실화 319억 원 등이 있다.

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에 모두 16조6804억 원을 투입해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전방위 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억제를 위해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전력 확보에 6조2156억 원을 편성하는 등 대대적인 보강에 나섰다.

국방부는 WMD 위협 대응전력 확보를 위해 F-35A 전투기는 물론 군 정찰위성,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장보

고-III Batch-I, 광개토-III Batch-II 등 다양한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Link-16 성능개량으로 대표되는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에 3443억 원을 편성하고 230mm 다련장 로켓 등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 핵심군사능력 보강에 1조9721억 원을 편성했다. 한국형 전투기(KF-X), K-2 전차, 한국형 기동헬기, 호위함 등의 무기체계에도 5조990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다양한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있다. 국방부는 사이버·우주·테러 대응과 국가 재난 지원능력 강화를 위해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의무후송헬기 등 다양한 전력을 갖출 계획이다. 이 분야에는 3865억 원이 편성된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첨단무기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7278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국내 방위산업의 안정적 생산여건 보장에도 신경을 썼다.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해 787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69.3% 증액된 것으로, 방산육성·지원 분야에 집중 투입이 될 예정이다. ☞

맹수열 기자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서애 류성룡함이 함포사격을 하고 있다. 해군 제공



공군 F-35A 전투기의 비행 모습. 공군 제공

군 역량 100% 발휘토록 전력운영비 33조 투입

전력운영비 주요 내용



일선 장병들이 드론을 이용해 작전을 벌이고 있다. 전력운영비에서 드론 관련 비용이 대폭 늘었다. 한재호 기자

전력운영비는 우리 군의 역량을 완벽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지원과 군 구조 정예화·전력운영 혁신, 병영문화 혁신 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획득한 첨단장비의 전·평시 효율적 가동을 위해 장비 유지비를 최근 10년 사이 최고 수준인 10.4%(3조 4695억 원) 증액했다. 지난해 3조 1427억 원에서 20년 3조 4695억 원으로, 무려 3990억 원이 늘었다. 또 시설유지보수비에 8211억 원을 투입해 시설의 수명연장과 작전능력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19년에는 86%, 20년에는 93%가 되어 21년 적정수준 100%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복무기간 단축, 도시화 등에 따라 실사격 훈련이 어려워지는 등 장병들이 숙련도를 쌓기 어려운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국방부는 모의사격 훈련장비(마일즈 장비) 도입에 459억 원을 들이는 등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오는 2022년 상비병력 감축과 이어지는 국방 인력구조 정예화 계획에 맞춰 부사관·군무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부사관 1522명, 군무원 3273명

등 총 4795명이 늘어나도록 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국방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군의 전투력 유지·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전투 분야의 군인을 전투부대로 전환할 것”이라며 “동시에 첨단장비 운용과 숙련된 전투력 확보를 위해 부사관과 군무원 증원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병의 개인 피복·장구 등 전투장비를 첨단소재와 최신 기술로 개선하는데도 1148억 원이 들어간다. 국방부는 올해 5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던 ‘워리어플랫폼’ 사업 가속화를 위해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571억 원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는 조준경·헤드셋 등 전투장비 9종과 신형 방탄복·방탄헬멧 등이 포함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드론의 군단·대대단위 활용을 위한 전투실험과 주요시설의 경계·정찰을 위한 드론 활용, 관련 교육 등에도 올해보다 88억 원이 늘어난 255억 원을 들여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VR·AR) 등 정보기술을 국방운영에 접목하는 분야와 사이버 감시·통제·정찰·방어 등 사이버 작전 요소에도 고르게 투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예비군 훈련 과학화와 동

원부대 장비·물자 보급 등 예비전력 정예화에도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자기개발 여건을 보장하는 등 생산적인 병영문화를 구현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내년 병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인 월 54만1000원(병장 기준)으로 오른다. 이는 올해 월 40만6000원에서 13만5000원 오른 금액이다. 이 외에도 1인당 급식단가를 올해보다 6% 인상하는데 640억 원이 증액됐다. 또 장병의 건강을 수호하고 언제나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단 의무시설 개선에 54억 원, 수도병원 현대화에 99억 원,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에 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장병들의 선호가 식단에 반영되고 한층 질 높은 급식이 가능하도록 초점을 맞췄다.

장병의 건강을 수호하고 최선의 진료환경을 위해 사단 의무시설 개선(54억 원), 수도병원 현대화(99억 원), 국군 외상센터 시범운영(67억 원), 야외 훈련 중 감염 위험이 높은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백신 접종 확대(95억 원) 등도 추진된다.

근무·주거환경 개선에도 대폭 투자된다. 국방부는 초급 간부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부숙소 3764실(1242억 원)을 확보하고, 여군 전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961곳(490억 원) 설치할 계획이다. 낙후된 전방의 조립식 생활관도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등 장병 근무·주거시설 개선에도 대폭 투자된다. 이로 인해 21년까지 초급간부 숙소 노후소요(19년 기준 7450실)를 완전히 해소할 전망이다.

특히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과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노

후 경유차 전면 교체 및 친환경차 도입, 마스크 보급 확대(연 18→50매, 164억 원) 등도 추진한다.

‘지역과 상생하는 군’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도 있다. 국방부는 장병·주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군 유휴시설을 107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폭 철거할 방침이다. 특히 218억 원을 투자해 해·강안 철책을 과학화 경계시스템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군의 경계력을 오히려 강화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맹수열 기자



예비군들이 과학화훈련장에서 실전적 훈련을 하고 있다. 조용학 기자



일선 장병들이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생활관에서 담소하고 있다. 양동욱 기자

2020년 국방예산 규모

(억 원)

구분	'19년 예산 (A)	'20년 예산		증감		
		정부안(B)	최종(C)	전년대비(C-A)	%	국회증감(C-B)
※ 국방예산(계)	46조 6,971	50조 1,527	50조 1,527	3조 4,556	7.4	-
• 전력운영비	31조 3,238	33조 4,612	33조 4,723	2조 1,485	6.9	111
- 병력운영비	18조 8,014	19조 8,817	19조 8,600	1조 586	5.6	△217
- 전력유지비	12조 5,224	13조 5,795	13조 6,123	1조 899	8.7	328
• 방위력개선비	15조 3,733	16조 6,915	16조 6,804	1조 3,073	8.5	△111